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제28권 제1호 2022 차 례

초빙편집인의 글

코로나 2년 후의 시민인식 - 생명, 정치, 노동 / 신진욱 1

기획논문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재론: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 김정 5

위기결집효과의 소멸과 당파성 정치의 복원:

코로나19 장기화의 정치적 영향 / 배진석 31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당파성의 역할 / 오현진 65

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

여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길정아 87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누가 지지하는가?: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민인식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 신진욱, 박선경 123

일반논문

몰인격성을 넘어:

행정운리의 기초로서 서(愨)의
이론적 검토 / 김인태, 최태현 155

공무원 충원방식과 조직 및 공직몰입 / 박종민, 한유성, 김공록 191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부역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현정 223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 연구 / 김다운 255

코로나 2년 후의 시민인식 - 생명, 정치, 노동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2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바이러스의 공격성은 서서히 약해졌고 인간들은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모든 곳에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던 초기에는 인류가 완전한 ‘뉴노멀’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지금은 위기 이전의 ‘올드 노멀’이 회복되고 있는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거리두기 정책은 크게 완화되었고, 직장과 학교의 대면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사람들의 사고 생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회귀(bounce back)가 아니라, 재난 경험에 대한 집단적 성찰과 학습을 통해 전환적 회복(bounce forward)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찰의 중심에는 생명, 정치, 노동에 관한 정치학적, 사회학적 질문들이 놓여 있다.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사회가 보인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 공동체의 위험 앞에서 정치적 분열과 통합의 역할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여론 환경은 견고했나?

이번 『정부학 연구』의 특집은 이러한 질문들을 구체화하고 그 대답을 구하기 위한 공동연구의 결실들이다. 여기 수록된 논문들은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연구단이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방역 정치, 시민들의 연대와 분열, 정치적 당파성과 양극화, 여야 협력에 대한 지지, 사회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여론 환경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첫 번째 논문인 김정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재론: 한국 사례의 비교 연구”는 감염병 위협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세 이념형으로서 윤리적 연대에 기초한 ‘신뢰 사회’ 논리, 합리적 공포에 기초한 ‘위험 사회’ 논리, 정서적 반발에 기초한 ‘분열 사회’ 논리를 구분하고, 한국에서 초기의 ‘위기 정치’ 기간에는 시민들이 ‘위험 사회’의 논리를 따랐던 데 반해 이후에 ‘정상 정치’ 시기로 전환하면서부터는 ‘분열 사회’의 논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응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뒤이은 배진석의 논문 “위기결집효과의 소멸과 당파성 정치의 복원: 코로나19 장

2 「정부학연구」 제28권 제1호(2022)

기화의 정치적 영향”도 위기 초기에 조성된 결집효과가 약화·소멸되는 과정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했다. 정부 방역의 성과가 뚜렷했던 초기에는 시민들의 성향에 따른 정부대응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점점 양극화되었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감정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 효과가 강력했다. 단합된 위기대응에서 분열된 위기대응 평가로 바뀐 것이다.

정치적 당파성 효과는 코로나19에 관련된 허위정보에의 취약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현진의 논문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당파성의 역할”은 팬데믹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가리키는 인포데믹(Infodemic)이 매우 정치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고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을 불신하는 양극화된 태도가 강할수록 방역정책을 공격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여야 간의 협력을 열망하는 여론도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길정아의 논문인 “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 여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는 여야 간 타협과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당파적 태도를 상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야 간의 협치의 노력이 유권자들의 당파적 양극화를 넘는 공동의 위기대응을 위한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다.

끝으로 신진욱·박선경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누가 지지하는가?”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사회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로, 돌봄, 청소, 배달, 운수, 물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지지의 강도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정치·이념성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험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 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재난 시기에 형성된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정치적 역량이 성공적 제도개선을 위해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2021년에 출간된 1차 연구결과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일관된 학문적, 정책적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은 일차적으로 감염병 위기로서 촉발되었지만, 이 상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대한 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정부 재난대응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정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코로

나19 시대'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시대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초빙편집인, 중앙대
신진욱

